

광주 중앙공원1지구서 옛 군부대 확인... 5·18 암매장 주목

5·18 당시 군사통제구역... 인근 '백일사격장' 서 암매장 시신 14구 발굴
무허가 건물 7개동 확인... 진상조사위 암매장 조사 지역에 포함 안 돼
재단 "공사 중 봉분·매장 흔적·유골 등 발견 땀 연락해달라" 협조 공문

단독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1지구'에서 옛 군부대 부지가 확인돼 5·18 암매장 연관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 군부대 부지는 1980년 5·18 당시 군사통제구역 내부에 있는데다 인근 '백일사격장'에서는 5·18 암매장 시신 14구가 발굴된 바 있어, 암매장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25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중앙공원1지구 공사 중 봉분, 매장 흔적, 유골 등이 발견되면 재단으로 반드시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최근 광주시 서구 쌍촌동 454-4 일대에서 대지면적 5129㎡(1550여평) 규모의 옛 군부대 시설과 부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중앙공원1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어울림숲' 공원이 조성될 공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 21일 민간개발자 측으로부터 군부대 건물 해체계획서를 접수받으면서 건물 존재 여부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에서는 본관으로 추정되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과 차고, 정비고, 보일러실 등 건물 총 7개동이 확인됐다. 모두 건축물 등록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등이 조사한 결과 건물은 1998년 국군정보사령부의 301정보부대 주둔지 조성과정에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편의대'로 불리는 301정보부대는 1980년 당시 상무대 내에 있었으며, 장발과 사복 차림으로 민간인으로 위장해 시민들 사이에서 5·18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림과 동시에 정보수집 활동을 했던 부대다.

이 부지 일대는 1980년 5월 당시 전교사 관할 구역이자 군사통제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던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본관과 단층주택이 들어선 부지는 지난 1964년부터 국가 소유였으며, 1994년부터는 국방부 소유로 기록됐다.

5·18 기념재단과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와 같은

산을 끼고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상무대 백일사격장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전투교육병과사령부(전교사) 소속 상무대 백일사격장에서는 1980년 5월 29일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의 동생을 비롯해 5·18 당시 숨진 14명의 시신이 가매장된 채 발견됐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암매장 조사 과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5·18 관계자들은 "이 부지에서 암매장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신을 상무대로 가져갔다는 목격담이 퍼져 있는데다 해당 지역은 전교사가 운영하는 군사통제지역 중 상무대에 가장 가까운 야산이었다"며 "계엄군이 시신을 부대 안까지 가져갔을 가능성은 낮은데다 실제로 인근 백일사격장에서 암매장 시신이 발견됐던만큼 해당 지점에서도 암매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백일사격장 유해 발굴 당시 직접 수습을 했었는데, 당시 중장비를 동원해 매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야산에 해당하는 중앙공원 1지구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시신을 매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군인들이 시신을 상무대로 빼돌렸다는 증언은 있어도 해당 부지를 특정해서 암매장지로 지목한 증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서구는 지난 2월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에 해체계획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위병소 등 추가 건물이 발견된 데 따라 해체 범위를 넓혀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혹시 모를 5·18과 관련성,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5·18기념재단과 협력하고 해체계획서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앙공원1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옛 301정보부대 건물 부지(아래쪽 원 안). 이 부지는 과거 5·18 암매장 시신이 발굴된 옛 '백일사격장' 부지(위쪽 원 안)로부터 같은 산을 끼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특조위 조사방식 등 수정 합의
채상병특검법 등은 합의 못해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앞서 야당은 국민의힘에 민주당과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달 채상병 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 투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의 표결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은 이들 법안을 상정할 거라던 본회의 소집에 응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좇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한 달도 윤 대통령 내의를 특검으로부터 잘 보호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그만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까지가 동사무소 앞에서 애타게 운 까닭은? ▶6면
- KIA 김도영 "30-30 욕심 없다" ▶18면
- 팔도 핫플레이스 - 경기도 가평 유럽 마을 ▶22면

생명의 땅
오름전남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3r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2024.5.25.-5.28.

JEONNAM 2024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THE 18th KOREAN YOUTH PARA GAMES

2024.5.14~5.17.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전라남도

주관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교육부

후원 KSPDF